



# 2006 지역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정 중 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장

## I. 머리말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대폭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계부채 조정의 진전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 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상황에 따라서는 이자부담으로 인한 소비회복이 제약받을 수 있으며, 건설경기는 둔화가 지속될 소지가 있다.

체감경기의 개선에 시일이 좀 더 소요되고 양극화 해결 등에 따른 복지 지출의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내수회복과 함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공급과잉 등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오는 5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와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등의 정치·사회적 일정이 지역경제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세계경제여건은 미국의 3%대의 성장과 중국의 8%대의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일본과 EURO 경제도 회복될 전망이며 세계교역량도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금융시장은 상반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마무리 되고 대외 불균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부각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의 확대 가능성이 전망된다.

여기에서는 참여정부의 4년차인 금년도의 경제정책 기본방향, 지역경제여건과 정책방향 등을 살펴보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할 지역경제 시책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 II. 국가 경제운용 기본방향

금년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5%성장과 35~40만개 일자리의 지속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표상 경기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동반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점차 이동함으로써 참여정부 3년간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 하였는데 단기적으로는 '06년 거시경제 전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정적 거시 경제 환경 조성 및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중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동반성장과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향후 미래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 등 미래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갈등과제에 대하여는 성숙된 논의를 토대로 합의와 원칙을 도출하여 국가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 연내 가시적 결과 도출이 필요한 10대 중점과제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10대과제로는 ①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②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활성화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④ 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화 추진 ⑤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⑥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 개편 ⑦ 중동·BRICs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기반 마련 ⑧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확충 ⑨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⑩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기반 확충 등이다

### III. 지역경제의 여건과 전망

최근 우리경제는 기술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국경 없이 이동하는 자유경제 체제하에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전에 따른 지식기반경제라는 환경변화에 더불어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모두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둔화, 고임금 및 투자부진, 기술축적과 인적자원의 개발 지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의 지역경제의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다.

#### 1. 경제성장 전망

금년도의 경제성장은 잠재 성장률 수준인 5% 내외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간 부진 했던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4%대 중반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는 내수회복으로 순환적 부진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둔화요인이 있으나 공공부문 공급확대, 민자 사업 본격화 등으로 급격한 위축은 없을 전망이며 수출은 해외수요의 지속과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등을 감안할 때 두 자리수 증가세가 지속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 주요국 주택시장 조정에 따른 소비위축,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여부,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 조정 등 불확실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2006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속에 잠재 수준의 성장·고용이 전망된다.

|          | 05년 실적   | 06년 전망              |
|----------|----------|---------------------|
| • 경제 성장률 | 3% 후반    | 5% 내외 <sup>1)</sup> |
| • 취업자 증가 | 30만명 수준  | 35~40만명             |
| • 소비자 물가 | 2% 후반    | 3% 수준               |
| • 경상 수지  | 180억불 수준 | 150억불 내외            |

경제 회복속도와 지속여부 등에 대하여는 전망기관 마다 차이가 있으나 잠재성장수준으로서의 회복의견이 지배적이다.

※ 경제성장률에 대한 합의 전망치(Consensus forecast)  
: 평균(Mean) 및 중위(Median) 전망치 5.0%

|     |       |            |                |      |
|-----|-------|------------|----------------|------|
| IMF | OECD  | World Bank | Global Insight | 한국은행 |
| 5.0 | 5.1   | 5.1        | 6.0            | 5.0  |
| KDI | 예산정책처 | 금융研        | 삼성研            | LG研  |
| 5.0 | 4.7   | 4.7        | 4.8            | 4.6  |

〈註〉 합의 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 전망치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의 단순 평균치와 중위치를 사용

## 2. 고용전망

금년도의 추세수준은 35만명에서 40만명으로 다소 상회하는 증가세인데 건설업 등의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에 따라 제조업 고용의 둔화세가 개선되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 3. 물가 및 경상수지 전망

금년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압력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유가 상승폭의 둔화, 농수산물 안정세 지속 예상 등으로 전반적인 물가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회복 등으로 총수요압력이 상승하고, 경기회복 기대감·지방선거 등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우려 등 물가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간의 경기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디플레 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제유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물가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연평균으로는 3%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주요 기관별 06년 물가전망(%) >

|         | 재경부   | 금융研 | 삼성研 | 韓銀  | KDI | LG研 |
|---------|-------|-----|-----|-----|-----|-----|
| 소비자물가   | 3% 수준 | 3.0 | 3.6 | 3.0 | 3.0 | 3.2 |
| 근원인플레이션 | -     | -   | 3.1 | 2.7 | 2.7 | 2.7 |

\* 05년 소비자물가 2.7%, 근원인플레이션 2.3% 상승

경상 수지로서 상품수지 흑자 폭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전체로는 05년에 비해 다소 축소된 150억불 내외의 흑자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 IV. 06년 지역경제 활력화대책의 추진방향

### 1.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

#### 가. BTL사업의 적극 참여

지난해부터 정부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자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중 연내에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BTL 대상사업으로는 복지시설로 노인의료복지시설확충,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복지회관확충 등 3개 분야가 있고, 문화 예술시설로는 도서관 건축, 박물관, 문예회관 등 3개 분야가 있으며, 시설 정비로는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거 교체, 노후수도관 정비 등 2개 분야가 있다. 지난해는 8개 분야에 15,493억원을 유치한 바 있는데 금년도는 8개 분야 26,216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나. 지방공기업 자금의 적극 활용

2004년 12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분야를 체육 시설업과 관광사업 분야로 까지 확대한 바 있는 데 금년도에는 이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체육시설업 분야로서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조정장, 카누장, 승마장, 썰매장 등이다.

둘째는 관광사업 분야로서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지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등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에서는 법령을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이 종전의 사업(주택, 토지개발 등) 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 투자활성화 지원 및 상반기 집중투자 유도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기획단을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역개발기금 용자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집중 용자대상 사업으로는 BTL사업, 지방 SOC사업 등이다. 참고로, 금년도의 지역개발기금 용자계획은 지난해 보다 304억이 증가한 1조 6,466억이다.

#### 다. 새마을금고 자금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난해 12월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과 자기자본의 50%를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385억원을 복지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금년도는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11조원 중 41,682억원을 복지사업 및 타법인 출자가 가능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역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인데 BTL 사업, 스포츠시설, 장례식장 등 공익성 사업에 적극참여하고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실버 및 탁아시설, 도서관 등 문화 복지사업을 확대·추진한다.

둘째,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적 지원인데 신용위원회 가입을 통한 신용불량자 재기 지원과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재난지역의 대출 상환 연장 및 이자의 납입유예 등이다

셋째, 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관계전문가 등 7~9명으로 『새마을금고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라. 공유재산활용의 조건완화로 민간기업 유치지원

행자부에서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활용 조건을 완화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행정재산의 위탁 경영시 이용료와 위탁보조금의 상계를 허용하여 공유재산의 시설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증대 시킬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생산·연구시설을 적극 유치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장기대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대상을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확대하고,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연구소를 추가하였다.

셋째,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공유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기업 활동지원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강화

### 가. 안정적 일자리사업 지원

정부지원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체 수익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형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행자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고용 창출기회 확대 및 청년 실업자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기회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고용기회 확대 및 청년실업대책 지속추진을 위해 행정 서포터즈, 행정기관 인턴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등 행정기관 취업연수를 적극 확대토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취업 알선 지원, 지자체별「취업정보센터」운영을 활성화하고 실업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여성 Part-time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 취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해는 7만 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정부목표 22만 9천명 중 지방은 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고, 금년도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총 89개 사업에 473,972명(지방자치단체 18개 사업, 163,589)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자체의 지원사업 계획은 다음

과 같다.

| 구 분    | 사업 내용(국가전체)              | 지자체 일자리 지원자수 |
|--------|--------------------------|--------------|
|        | 18개 사업(89개 사업)           | 163,589명     |
| 청년실업대책 | 행정D/B구축 등 2개(해외취업 등 51개) | 8,760        |
| 사회적일자리 | 노인일자리 등 14개(노인일자리 등 20개) | 77,485       |
| 취업계층지원 | 고용촉진훈련 등 2개(자활근로 등 18)   | 77,344       |

## 나. 서민생활 보호대책 강화

### 1)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 생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노숙자와 쪽방거주자 등 생계 취약계층의 보호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인데 사회복지사가 관내 생계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지원활동의 강화와 노숙자 쉼터 입소유도, 쪽방 등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였다.

둘째, 결식아동 및 거동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지원인데 부실도시락 근절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급식을 가정에 배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내 유관기관, 종교·시민단체 등의 민간사회 안전망 참여를 활성화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및 의료·복지지원 활동 등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2) 영세민·소규모 자영업자 등 생활보호 대책 추진

영세민 생활보호 및 일자리 보급 확대로 일시적 소득감소·실직자 등을 적극 발굴하는 보호대책의 강구로 간병 도우미, 폐자원 재활용 등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경기 침체로 휴·폐업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상담과 지원을 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부족한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 3) 서민경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원노력 강화

지역내 업소와 상품 애용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용, 목욕탕,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지역 업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의 농·축·수산물 애용 및 재래시장 살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에 외부 식당 이용, '가족 외식의 날' 운영 등으로 공무원 외식 장려 등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겠다.

### 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관리 강화

금년도에는 지역물가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별·자치단체 물가관리 61개 품목별(개인서비스 49, 공공요금 12)로 물가관리 및 소관부서의 지정 및 책임관리제 시행을 통한 지역단위 물가관리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치단체·경찰·세무·위생 등 『물가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며 소비자단체 주관의 캠페인 등 자발적 시민운동 지원, 업주·사업자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유도,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한 대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물가관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물가상승률, 자치단체의 물가안정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하여 기관표창 및 시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3. 향토자원의 개발·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가.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의 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WTO, FTA 등 다양한 협정체결에 따라 우리의 주력상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김치, 인삼 등의 전통 산업마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WTO 출범으로 인한 외국 농산품의 무분별한 도입 등으로 국내 농수산물 가격의 폭락 등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역고유의 향토자원의 개발 및 보호에 대한 국가 지원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향토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에 처하여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04년 기준 57.2%수준이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만도 전 지방자치단체의 15.2%인 38개 단체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블루오션 전략차원에서 향토 자원의 개발 및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소프트적 성격인 향토자원 개발육성을 통해 장기적·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

#### 나. 향토자원의 개발·보호 방향

첫째 사장위기의 향토자원보호·육성인데 향토자원 관련 기술과 기능의 보호를 통해 사장되어가는 향토자원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유기술 및 전래 민간요법 중 가치 있는 기술과 처방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별 차별화된 향토자원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인데 낙후지역에 차별화된 향토자원 개발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유도 및 내생적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향토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지역공동브랜드(보령 머드랑, 함평 나르다 등)를 개발·육성하여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체계(RIS)를 활용한 내재적 新성장동력 창출인데 RIS를 활용한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전략을 마련하고, 주5일제 근무가 생활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5都 2村 생활의 시범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다. 06년도 향토자원 활성화 시책 추진

향토자원의 개발 및 보호의 핵심시책으로는 향토자원 품질인증제 도입, 향토자원에 대한 National D/B 구축 및 지역 유망공동브랜드 육성과 판매·마케팅 지원사업이 있고 기타 시책으로는 향토자원개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향토전문기업·명인지정제도 도입, 지역민 교육 및 향토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다.

금년도에는 향토자원의 개발 육성을 위한 국가전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전국 향토자원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토자원 DB 구축자료로 활용할 계획

이며,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향토자원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토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향토자원의 유형별 가상프로세스를 수립한 후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향토자원 품질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향토자원 관련 세미나, 공청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향토자원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여 전 국민의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 VI. 맺는말

금년도는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4년째가 되는 해로서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의 기반 구축”을 2006년 경제운용 목표로 정하고 5%성장과 35~40만개 일자리의 지속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지역발전체제 구축”을 금년도 목표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 자립기반 구축,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의 가속화 및 지역의 내생적 균형발전 역량 강화”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부터 행자부와 전국 자치단체에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대책의 독려와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 순회 경제교육, 지자체 자체 간담회 및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